

담론 분석을 통한 기록관리전략 연구*

5·18 담론의 기록왜곡 사례를 중심으로

이진룡**, 임진희***

1. 머리말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선행 연구
 - 3) 연구 범위 및 방법
2. 5·18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담론 분석
 - 1) '민주화운동' 담론
 - 2) '항쟁' 담론
 - 3) '폭동' 담론
 - 4) 분석 종합 및 시사점
3. 5·18 담론 형성과정에서 기록의 역할 분석
 - 1) 담론별 핵심기록 유형과 내용
 - 2) 기록의 왜곡 실태 분석
 - 3) 분석 종합 및 시사점
4. 기록 왜곡에 대응하는 기록관리 전략
 - 1) 5·18 관련 기관의 대응현황
 - 2) 기록 왜곡 대응 조직 및 프로세스 설계
 - 3) 왜곡이 용이한 기록물에 대한 관리 방안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16년 2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정보학 석사논문을 요약·수정한 것임.

** 이진룡, 알엠소프트 연구원(제1저자).

*** 임진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교신저자).

▪투고일: 2016년 3월 20일 ▪최초심사일: 2016년 3월 28일 ▪게재확정일: 2016년 4월 15일.

[국문초록]

2011년 5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5·18이 시민운동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역사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사례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5·18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입장으로 이를 부정하는 기록물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도처에 널려 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록물을 왜곡하면서까지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5·18 기록을 왜곡하는 담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키비스트의 기록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제를 두었다.

또한 본 연구는 아키비스트가 기존에 시행 중인 왜곡 대응에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함과 동시에, 아직 왜곡 담론에 휩쓸리지 않은 학생 등을 위주로 이들에게 진실된 기록을 토대로 한 담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아키비스트는 한정된 기록관에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소극적 입장이 아닌, 적극적으로 5·18 담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입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지속적으로 연구될 기록 왜곡 대응 전략 분석에 본 연구가 가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주제어 : 5·18, 민주화운동, 항쟁, 폭동, 담론분석, 왜곡 담론, 기록관리 전략

1. 머리말

1) 연구 배경과 목적

5·18¹⁾ 기록물에 대한 사실 인식과는 다른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5·18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²⁾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³⁾처럼 기록물을 확대·축소 해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가공하여 왜곡된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 가지 예로 보수적 입장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시스템클럽’의 대표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될 당시 5·18을 ‘민주화운동’이 아닌 북한의 뜻에 따라 움직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폭동’이라 주장하며 등재를 거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⁴⁾ 그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기록을 증거로 들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비록 나중에 그의 주장이 왜곡이며 가공된 논리라는 점이 밝혀졌지만, 기록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5·18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시키려 했다는 점은 깊게 생각해볼 만한 사건이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담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기록물의 활용,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은 존중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록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5·18의 왜곡된 해석에 대한 반박 노력은 계속해서

1) 5·18의 공식 용어는 ‘5·18 민주화운동’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광주 항쟁’, ‘광주 폭동’ 등을 사용하는 담론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에 이들의 용어를 아우를 수 있는 ‘5·18’을 중심 용어로 사용한다.

2) 유네스코와 유산(<http://heritage.unesco.or.kr>),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

3)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은 자기 생각에 맞추어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행위,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를 말한다.

4) “내가 5·18에 대해 가장 많이 안다.”(시사IN, 2011.5.23.)

이루어지고 있다. 「5·18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 겸용)」은 광주광역시와 함께 2013년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훼손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법률 사이버 대응팀을 통해 5·18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에 대항하고 있었다.⁵⁾ 비공개로 신고 사례가 접수되는 이 센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통해 5·18을 반대하는 집단의 주장 중 왜곡된 사례를 찾아 고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대일 대응만으로 그들의 왜곡된 담론적 실천 행위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 이들을 막아냈다 하더라도 아직 5·18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여 후세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담론을 주입하게 된다면 이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은 본 연구의 시작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사회 곳곳에서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기록 왜곡 사례에 대해 아키비스트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관심을 갖고, 그 중에서도 기록 왜곡 사례의 중심에 있는 5·18 담론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5·18을 둘러싸고 여러 담론을 형성한 집단 중 기록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집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록관리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선행연구

기존에 5·18과 관련한 담론 연구는 주로 언론·정치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시행되었다. 허윤철 외 3인은 5·18 담론의 주요 특징과 변화양상을 신문의 기사와 사설을 통해 파악하였고⁶⁾, 박경동·유경남은

5) 광주광역시(<http://www.gwangju.go.kr>),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훼손사례 신고센터’.

5·18 관련 발표문, 성명서, 유인물 등의 텍스트에 대한 담론을 시기별로 분석하는 연구를 주로 다뤘다.⁷⁾ 그리고 전재호는 5·18 담론의 변화와 한국 사회의 정치 변동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며, 시기별로 구분하였다.⁸⁾ 이외에도 이용기와 김재균은 5·18에 대한 역사 서술의 변화 양상에 관해 서술하거나,⁹⁾ 5·18 관련 담론의 변화를 위주로 정리하였다.¹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5·18에 관한 시기별 담론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기록학 분야에서 5·18 담론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어쩌면 담론분석이라는 연구가 텍스트의 구조에 따라 형성된 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 현상을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므로, 기록학 분야보다는 언론, 정치학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박경동·유경남의 연구¹¹⁾에서 분석되었던 담론분석의 한계로 왜곡된 기억에 대항하는 담론 형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록 역시 검증되지 않은 사료에 의존할 때가 많다는 점은 기록학 분야에서의 담론분석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사건의 전말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언기록으로 사용되는 미검증된 사료는 언제나 정당성의 문제로 환원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기록학 분야에서도 더 이상은 담론분석이 간과할 수만은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6) 허윤철, 강승화, 박표주, 채백, 「한국 언론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58, 2012.

7) 박경동, 유경남, 「5·18과 인터넷:5·18관련 인터넷정보실태조사」,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8) 전재호, 「5·18 담론의 변화와 정치 변동」, 『학술단체협의회』, 푸른숲, 1999.

9) 이용기, 「5·18에 대한 역사서술의 변천」, 『학술단체협의회』, 푸른숲, 1999.

10) 김재균, 「5·18과 한국정치」, 에코미디어, 2010.

11) 박경동, 유경남, 「5·18과 인터넷 : 5·18관련 인터넷정보실태조사」,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5·18 기록을 왜곡하는 담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키비스트의 기록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5·18을 중심으로 담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를 선정하고, 그들이 어떠한 기록적 근거를 가지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5·18의 담론별 인식 차이에 대한 텍스트 분석은 특정 사회 내의 담론 간 이데올로기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미셸푸코의 담론분석을 적극 차용하기로 하였다.

현재 5·18의 공식 명칭은 ‘5·18 민주화운동’이다.¹²⁾ 앞서 말했듯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역시 ‘5·18 민주화운동’이라 부르며 5·18의 숭고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¹³⁾ 또한 보수적이라 인식되었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도 ‘민주화운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태이다.¹⁴⁾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끊임없이 5·18을 ‘항쟁’이라고 부르거나 심한 경우 ‘폭동’이라 부르는 담론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는 국가적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담론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담론분석을 위한 대상 집단 선정에는 5·18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담론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담론의 형성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동아일보」와 「5·18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 겸용)」, 그리고

12) 연구자는 공식명칭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10182호, 2011.03.24.]의 법명에서 나온 ‘5·18 민주화운동’으로 근거를 두었다.

13) 유네스코와 유산(<http://heritage.unesco.or.kr>),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14) 「한국 언론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담론」을 연구한 허윤철외 3인을 통해 언론사의 5·18 용어 사용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정치변동이라는 계기로 ‘광주사태’라는 지배적 담론이 정통성의 위기를 겪으며 후퇴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담론이 새롭게 부상하여 지배적 담론으로 굳어지는 과정을 겪어왔다고 분석하였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간베스트, 일베 겸용)」를 대상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동아일보」를 선정한 이유는 한국의 대표적 시장 지배 신문사로 볼 수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비교했을 때 이데올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세 신문을 함께 분석한 실증적 연구에서 「동아일보」가 세 신문 가운데 가장 가운데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¹⁵⁾ 여기에 더해 담론 형성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하였기에 기사문이 아닌 사설을 중심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5·18 기념재단」을 선정한 이유는 5·18 단체의 공식 대표 집단으로서 현재 5·18 기록물의 협력적 수집·관리·서비스를 위한 사업¹⁶⁾을 주도하는 등 5·18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이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선정한 이유로, 이들은 현재 5·18 담론을 비롯한 다수의 집단에 대해 강력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자극적인 내용을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역사로서의 5·18」 등 보수단체로부터 근거를 찾아 게시물로 생산하고 있었다.¹⁷⁾ 결국 그들은 왜곡 담론의 수용자임과 동시에 생산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파급되는 효과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대한 분석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담론분석의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담론을 형성하는 집단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5·18의 인식에 대해 동질성을 갖는 집단들이 표현하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담론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따라서 담론분석을 위해 선정된 대상 집단 외에도 각 담론

15) 이원섭,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52, 2007, 325~366쪽.

16) 5·18 기념재단, 한국국가기록연구원, 「5·18 민주항쟁 기록물의 협력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15.

17) “이제 국가 앞에 당당히 선 ‘일베의 청년들’”, (시사IN, 2014.9.28.)

을 형성하는 집단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밝힌다.

분석을 위한 대상 기간은 용어 생성 시기와 집단별 특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각 담론별로 차등을 두었다. 우선 「동아일보」는 5·18 발생 시기인 1980년 5월 18일부터 현 정권을 제외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보았다. 현 정권을 제외한 이유는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를 분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5·18 기념재단」과 「일간베스트 저장소」는 홈페이지 생성 시기부터 본 연구 시작 시기인 2015년 9월까지로 보았다. 이들은 각각 홈페이지 개설 시기가 1994년, 2012년으로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분석 시기와 같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검색어는 허윤철¹⁸⁾의 연구를 토대로 나온 5·18 관련 용어를 참고하였으며, 이 중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용어들을 각 담론의 대표 용어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민주화운동’ 담론, ‘항쟁’ 담론, ‘폭동’ 담론이 5·18의 주요한 세 담론으로 선정되었다.¹⁹⁾

다음으로 기록 왜곡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연구를 위해 고안한 분석 절차를 통해 단계별로 출처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각 담론이 주장하는 글이 신뢰성을 얻으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각 담론별 근거로써 사용되고 있는 텍스트를 따라 이를 역추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각 담론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순서는 분석을 위한 내용과 일치할 경우 수집에 들어가며, ‘출처(증거 기록물)

18) 허윤철, 강승화, 박표주, 채백, 「한국 언론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58, 2012.

19) 사실 허윤철의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 ‘민주화운동’의 용어는 ‘사태’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태’라는 용어는 1988년부터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면서부터 ‘사태’라는 용어 대신 ‘민주화운동’을 공식 용어로 사용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시대의 담론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사용한 기록물을 파악하기 위해 ‘사태’ 대신 두 번째로 빈도수가 높았던 ‘민주화운동’을 대표 용어로 선정하였다.

제시 유무', '원출처 발견 시 원본과 대조' 등의 과정을 거쳐 기록물 왜곡 사례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기록물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기록관리 전략은 연구자가 직접 참여한 '5·18 민주항쟁 기록물의 협력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015)²⁰⁾'를 토대로 프로젝트 내에서 분석한 결과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2. 5·18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3가지 담론 분석

1) '민주화운동' 담론

'민주화운동'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정권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시각을 가지며 변화하였다. 사건이 일어났던 초반 전두환 정부에서는 5·18을 '광주 사태'로 불리었는데, 그 당시 정부는 5공화국 내 신군부에 의해 권력이 집중됨에 따라 언론 탄압이 자행되었을 시기였다. 따라서 5·18을 자행한 신군부가 참여주체나 책임성의 문제보다는 사건이나 상황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 '사태'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만행을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컸다.²¹⁾ 하지만 노태우 정부 이후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광주 사태 치유방안'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청문회가 들어섬에 따라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마지막 김대중 정부에서는 더 이상 광주에 한정된 것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시민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운동이었음을 알리기 위해 '5·18 민주화

20) 5·18 기념재단, 한국국가기록연구원, 「5·18 민주항쟁 기록물의 협력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15.

21) 허윤철, 강승화, 박표주, 채백, 앞의 글, 138쪽.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분석한 「동아일보」 사설 내 5·18과 관련한 '민주화운동' 담론 관련 게시글은 총 55건이 검색되었다. 이 중 '민주화운동'에 대한 담론 형성이 뚜렷한 사설 22건을 추출하였다. 「동아일보」 내의 사설은 5·18이 '역사적 평가'와 '진상 규명'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민주화운동' 담론을 정당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²⁾

80년 5월 18일로부터 17년이 흐르는 동안 광주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달라졌다.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또는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 저항권의 정당한 집단적 행사로 의미가 재평가되고 항쟁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또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으로 광주학살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지난 4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아쉬운 대로 일단락됐다. 5·18을 국가 기념일로 공포한 것도 광주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하나로 평가된다. (법정기념일로 맞는 5·18, 2007. 5·18)

이와 관련해 아래 사설 역시 5·18은 5공화국이 무너진 뒤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1988년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결국 '광주 사태', '광주 항쟁' 등의 용어가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격상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열 돌을 맞는다. ...(중략)... 5공이 무너진 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무성하게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틈새에서 정부도 88년 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종래의 통칭 「광주사태」 「광주항쟁」을 「광주민주

22) 인용문에 표시된 밑줄은 연구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한 것이다. 이하 인용문 역시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화운동」으로 격상시켰고 같은 해 11월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특별위원회는 3개월간 70명의 증인을 등장시켜 사태의 전모
를 규명하려 했다. 그러나 끝내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
로로 살상이 자행됐는지 그 진상이 말끔히 밝혀지지 못한 채 오
늘에 이르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10주년/명예회복 조치 서둘
러 화합 이룩하자, 1990.5.17)

이렇듯 ‘민주화운동’ 담론은 법이라는 강력한 장치를 배경으로 자신
의 담론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담론의 정당화를 위해 그동
안 ‘사태’로 사용되었던 5·18에 대한 비판과 적극적인 재조명을 강조함
으로써 ‘민주화운동’ 담론을 정당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항쟁’ 담론

‘항쟁’이라는 용어는 1983년 이후 신군부의 탄압에 대항하기 위해 나오
기 시작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유화 정책 이후, 신군부 세력에 대한 도전
과 시위의 움직임이 커지게 되며 시민들은 ‘항쟁’이라는 용어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을 계기로
5·18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일어났고, 이때부터 시민단체 등은 5·18을 ‘사
태’가 아닌 ‘의거’ 혹은 ‘항쟁’이라 부르며 담론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²³⁾

5·18 관련 단체에서 형성되고 있는 ‘항쟁’ 담론은 그 중심을 「5·18
기념재단」으로 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들은 공식 기관이라는 특성상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
하고 있었지만 각종 행사, 교재 등의 자료에서는 5·18을 ‘항쟁’이라 표
현하고 있었다.²⁴⁾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분석한 「5·18 기념재단」 내

23) 나간채, 『광주항쟁 부활의 역사 만들기 : 끝나지 않은 5월 운동』, 한울아카데미, 2013.

‘항쟁’ 담론 관련 게시글은 총 30건이 검색되었고, 그 중 5·18을 ‘항쟁’이라 주장한 게시글 9(30%)건을 추출하였다.

게시글을 통해 알아본 ‘항쟁’ 담론은 전두환 정부 시절 암묵적으로 금지되었던 ‘항쟁’에 대한 용어 사용이 김영삼 정부로 넘어오며 ‘진상 규명’을 통해 계엄군과 ‘맞서 싸워’ 이뤄낸 업적이었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쟁이라고 하면 “맞서 싸운다”는 의미가 있고, 운동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 또는 그런 활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상 규명과정에서 5·18 단체와 광주시민들은 5·18을 광주항쟁, 혹은 5·18민중항쟁이라 불렀습니다. …(중략)…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5·18의 공식 명칭은 5·18민주화운동이 되었지만, 여전히 광주 시민들은 5·18민중항쟁이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사태, 5·18, 오월항쟁, 5·18민주화운동/민중항쟁, 모두 같은 말인가요?…’)

또한, 시민들이 ‘계엄군의 최초 집단 발포로 인한 시위대 사망’을 근거로 들며, 그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시민들이 ‘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

5월 20일 밤 11시경 광주역을 지키고 있던 공수부대와 시위대의 공방전이 격렬해지고 시위대가 차량을 앞세워 군의 저지선을 돌파하려하자 군은 일제히 총을 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시민

24) 「5·18 기념재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광주) 항쟁’이라는 용어가 ‘(광주) 민주화운동’ 용어보다 더욱 큰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이 둘을 구분할 때의 기준은 국가적 관점을 따른다 하였다. 즉, 「5·18 기념재단」이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의 경우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외 본질적인 의미 등을 중요시 여기는 시민 단체, 기관 등은 ‘항쟁’의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을 향한 최초의 집단 발포였습니다. 이후 21일 금남로 집단발포로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기자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총을 들어서 군인들도 어쩔 수 없이 총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이외에도 ‘항쟁’ 담론은 5·18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맞선 시민의 총체적 참여와 희생정신은 한국 민주화 과정의 원동력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촉발의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3) ‘폭동’ 담론

‘폭동’이라는 용어는 5·18이 일어났던 당시부터 ‘폭도’, ‘사태’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었다. 그 당시 광주소요사태 분석을 보면, “5.17 계엄확대 실시 이후 …(중략)… 광주지역에서는 군의 초동 진압 미진으로 계엄군에 대한 두려운 감이 감소되면서 일부 불순분자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동과 악성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시킴으로서 폭도화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폭동’이라는 용어는 ‘광주사태 치유방안’을 통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지만, 5·18을 부정하는 집단은 ‘폭동’을 자신들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집단 중 가장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는 집단이 바로 「일간베스트 저장소」라 할 수 있는데, 일베를 분석한 글²⁵⁾에 따르면, 일베는 우선 자신들이 부정하는 집단들은 ‘무임승차론’에 의한 혐오를 기반으로 부정하고 있다. 일베의 주적(主敵)은 크게 ‘여성, 진보·개혁 진영, 호남’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베 이용자들은 이 세 집단을 ‘권리와 의무의 불일치’로 분류하

25) “이제 국가 앞에 당당히 선 ‘일베의 청년들’”, 시사IN, 2014.9.28.

며 국가에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과도하게 요구하는 집단으로 보았다. 또한 5·18과 관련된 유가족 역시 권리를 다하지 않고 보상만을 요구하는 ‘무임승차’ 이미지를 강조하며, ‘정의 구현’이라는 식으로 게시판에 5·18을 부정하는 담론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분석한 「일간베스트 저장소」 내 ‘폭동’ 담론 관련 게시글은 총 1,527건이 검색되었고, 그 중 담론을 주장하는 게시글을 125(10%)건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처를 제시한 게시글은 총 36(28.8%)건이 추출되었다. 분석 대상 전체 게시글 중 단지 10%만이 ‘폭동’ 주장 관련 게시글인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유머사이트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들은 ‘폭동’을 단지 상대방을 향한 비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게시글은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에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용자들이 올리는 게시글 중 ‘폭동’ 담론에 대한 근거를 가장 잘 설명한 용어는 ‘총기로 무장한 시민군’이며, 이는 계엄군이 막아야 할 폭력적인 집단이라 묘사했다. 그들은 ‘광기 수준의 폭도’와 ‘광주 시민의 피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를 정당화시키고 있었다.

“거의 집단 광기 수준의 폭도들이 광주를 점거한 상황에서 어떤 범죄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걸 그대로 놔둬야 하는 것 자체가 계엄군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 당시 상황은 광주 폭도들이 총기로 무장한 상황에서 광주가 셀프 고립 되는 상황이었고 광주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라면 모르겠는데 타지역과의 물자교류가 차단된 상황에서 고스란히 광주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건 당연한 수순 아닐까? 무기고 털고, 건물 방화에 교도소까지 터는 폭력 집단인데 그 보다 더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있나?...” (솔직히 전두환이 없었으면... 2013.10.26.)

‘광주 폭동’이라는 근거는 내란 음모 및 ‘북한 특수군의 개입’에 의한 ‘선동’이라는 입장도 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 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5·18은 폭동이다” 서울고법 승소.gisa. 2012.8.25.)

결국 게시글을 토대로 분석한 ‘폭동’ 담론에서는 폭력적인 시위를 행사한 시민군이 계엄군을 포함해 무고한 일반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담론에서 시민군은 ‘총기를 사용’하거나, ‘계엄군을 희생’시키고, ‘내란 음모’를 꾸몄으며, ‘북한군이 개입’해 선동당한 폭도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분석 종합 및 시사점

담론분석 결과 각 담론을 주로 형성하고 있는 집단에서 각각의 텍스트를 사용한 것으로 인해 담론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 1>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표 1> 5·18 담론별 사용된 텍스트

담론	텍스트
‘민주화운동’ 담론	‘역사적 평가’,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등
‘항쟁’ 담론	‘자기 방어’, ‘공동체적 시민참여’ 등
‘폭동’ 담론	‘총기로 무장한 시민군’, ‘계엄군의 첫 사망’ 등

결국 이 세 담론은 각자가 주장하는 증거 기록 내에서 텍스트를 추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각각

의 담론은 자신들의 기억에 대한 정체성을 기록을 통해 후세에 전승하고자 하는데, 그들은 기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문자적 메타포(Metaphor, 전이)를 형성함으로써 기록을 남기고 이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²⁶⁾

3. 5·18 담론 형성 과정에서 기록의 역할 분석

1) 담론별 핵심기록의 유형과 내용

담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과 확실한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텍스트는 단지 텍스트로서의 역할을 할 뿐 증거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텍스트와는 달리 기록은 증거가 될 수 있다. 때문에, 특정 담론을 형성하는 데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기록이 있다면, 그 담론은 더욱 신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3장에서는 5·18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활용하는 기록이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는지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으로 하였다.

그럼, 먼저 ‘민주화운동’ 담론과 ‘항쟁’ 담론 형성에서 기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항쟁’ 담론은 서로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였지만, 5·18의 숭고한 가치는 지키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5·18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대해 공식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고안한 절차를 통해 근거를 역추적하여 분석한 결과 두 담론은 5·18 관련 법률이나, 그 당시 수사기록 등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수많은 근거 중에서도 특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됨으

26) Aleida Assmann, 변학수, 백설자, 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187~28쪽.

로써,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된 것을 가장 큰 증거로 제시하고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기록물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표 2>는 이러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²⁷⁾

<표 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

유형	내용
①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해당 유산의 본질 및 기원(유래)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일 것
② 독창적(Unique)이고 비(非)대체적(Irreplaceable)인 유산	<p>특정 기간 또는 특정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경우</p> <p>해당 유산이 소멸되거나 유산의 품질이 하락한다면 인류 유산의 발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리라 판단되는 경우</p>
③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Time) : 국제적인 일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현저하게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경우 ● 장소(Place) :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와 지역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 사람(People) : 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현저한 기여를 했던 개인 및 사람들의 삶과 업적에 특별한 관련을 갖는 경우 ● 대상/주제(Subject/Theme) : 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 형태 및 스타일(Form and Style) : 뛰어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가지거나 형태 및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27)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 <<http://heritage.unesco.or.kr>>.

④ 보조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성(Rarity) : 독특하거나 희귀한 자료 • 원 상태로의 보존(Integrity) : 온전한 하나의 전체로서 보존되어 있는 경우 • 위협(Threat) : 해당 유산이 각종 위험 요소에서 안전한 가 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 조치가 적절한지의 여부 • 관리 계획(Management Plan) : 해당 유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보존 및 접근 전략의 존재 여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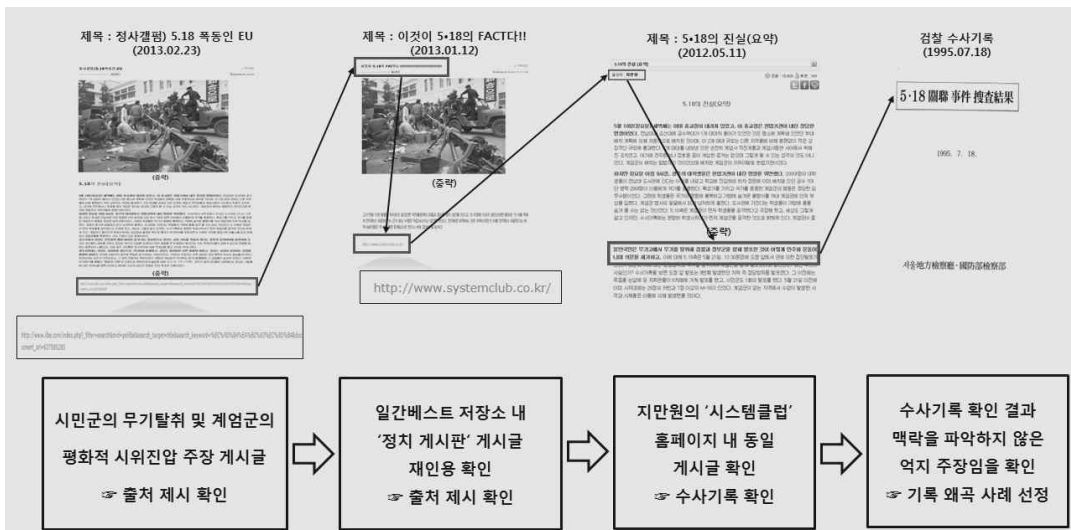
<표 2>에서 보듯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①, ④ 항목과 같이 신뢰성과 진본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③ 항목과 같이 특정 시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기에 이를 후대에 자산으로 남길 수 있는 유산이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공식적 인정을 근거로 ‘민주화운동’, ‘항쟁’ 담론을 형성하였다는 점은 그들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결국 두 담론은 5·18 관련 기록이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써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고, 상황의 진실이 기록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폭동’ 담론 형성에서 기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담론분석 결과 ‘폭동’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용자들은 표적의 대상이 되는 주제에 대해 원자료를 재가공하고, 이를 부정적인 해석과 함께 2차 정보로써 게시판을 통해 입장 표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진 게시물 중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은 게시글은 추천과 함께 ‘일간베스트’로 선정이 되는데, 만약 이러한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생성이 될 경우 그 주제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마녀사냥식 처벌을 받게 되며, 이후 새로운 담론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들이 담론 형성을 위해 제시하는 근거 기록으로는 ‘시민군의 사진’, 5·18 사건 당시의 ‘판결문, 수사기록’과 ‘언론, 미디어 기사’,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기록’,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 등이 있다. 이용자들은 이 근거를 직접 복사하여 제시하거나, 여러 단계의 출처를 거쳐

게시하는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근거를 인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폭동’ 담론은 기록의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였지만, 확인 결과 모두 왜곡, 은폐된 기록물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주로 출처의 근원을 같은 극우 단체 사이트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홈페이지²⁸⁾와 김대령의 ‘역사로서의 5·18’ 단행본²⁹⁾으로 두고 있는데, 이 사이트를 역추적해보니 이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기록물을 왜곡, 은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기록왜곡출처 파악을 위해 분석한 역추적 프로세스다.

<그림 1>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글 내 ‘폭동’ 주장 담론 역추적 프로세스 분석 결과



이 프로세스는 ‘민주화운동’, ‘항쟁’ 담론에도 동일하게 시행되었지만 두 담론 모두 진실된 기록을 근거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분석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5·18 기념재단」 및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정보공개청구의 주요 이

28)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http://www.systemclub.co.kr>>.

29) 김대령, 『역사로서의 5·18』, 비봉출판사, 2013.

용자가 일간베스트 이용자라는 점은 이들이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활용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2) 기록의 왜곡 실태 분석

담론분석 결과 ‘민주화운동’과 ‘항쟁’ 담론은 각종 법령 및 정권별 정책의 변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근거 등에 따라 증거 기록물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폭동’ 담론은 기록의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였지만, 그 근거를 모두 왜곡, 은폐하는 등 잘못된 기록물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록왜곡실태 분석 대상으로 ‘폭동’ 담론을 형성, 유포하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대해 추가로 기록을 왜곡한 사례에 대해 파악해보기로 하였다.

우선 왜곡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다.³⁰⁾ 하지만 이런 정의가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을 평가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평가자마다 주관이 다르기 때문인데, 결국 왜곡에 대한 평가 역시 객관적 원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기록의 왜곡은 생산자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 논란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5·18에 대한 기록물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왜곡에 대한 기준을 평가자의 입장에서 ‘기록물의 조작, 은폐’,³¹⁾ ‘기존 사실과는 다른 해석’ 두 가지로 나누고 분석하였다.

기록 왜곡실태 분석 과정에서 뚜렷하게 발견된 기록 왜곡 유형은 총

30) 표준 국어대사전.

31) ‘조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들’ 혹은 ‘지어서 만들’이다. 반면 ‘은폐’의 사전적 의미는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이다. 이 둘의 의미는 분명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기록물 자체에 대한 인위적 왜곡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하나로 분류했음을 밝힌다(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6건이며 중복 사례 2건을 제외한 4건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였다.³²⁾

첫 번째 사례로는 기록물 조작, 은폐 유형으로 ‘5·18 기념재단 타임라인 기록물 조작’을 살펴볼 수 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용자는 직접 5·18기관을 통해 그들이 제공하는 기록물을 이용, 왜곡하고 있었다. 다음 그림은 「5·18 기념재단」 내 ‘타임라인’을 왜곡한 일베 게시글이다.

<그림 2> ‘5·18 기념재단 타임라인 기록물 조작’ 분석 결과

제목 : 5·18이 민주화 운동이든 폭동이든 첫 사망자는 경찰이다 (게시일자:2012.12.21)

5.18이 민주화 운동이든 폭동이든 첫 사망자는 경찰이다.timeline

(중략)

2012.12.21 01:27:13

(중략)

5월 19일 16:30에 첫 희생자(부상자) 김영현이 나왔다.

5·18 기념재단 타임라인 (주소:www.518.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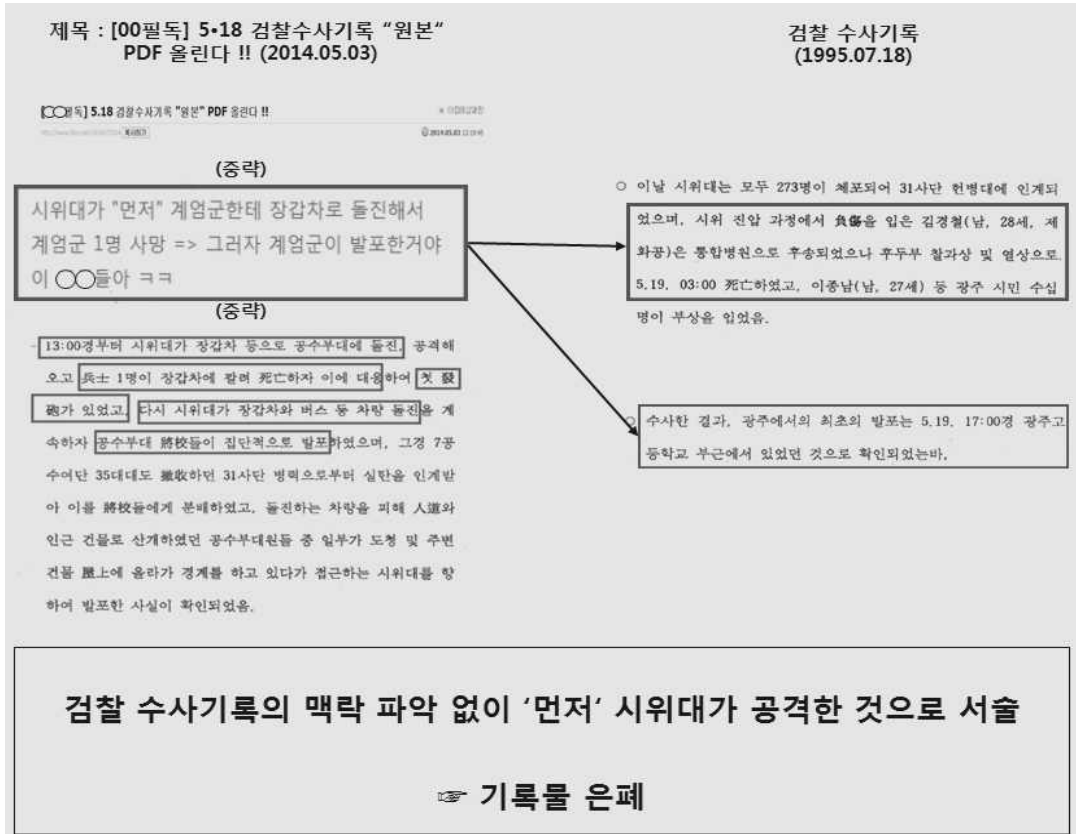
**5·18 기념재단 내 ‘타임라인’ 관련 정보의 은폐·조작하여
첫 사망자는 경찰이라 주장
(타임라인 수정 후 게시글 등재)
기록물 조작·은폐**

32) 게시글 중 욕설 등을 사용한 용어는 ‘○’ 처리했음을 밝힌다. 이하 게시글 역시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타임라인’에서는 최초 사망자를 청각장애인 ‘김경철(19일 사망)’씨로 지정하고 ‘검사 조서’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일베 이용자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한 채, 5월 20일 21시 경찰 4명이 첫 사망자라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사진의 위치를 바꾸며 ‘김영찬’군을 최초 부상자로 조작하여 표시하였다. 이는 ‘타임라인’의 최근 업데이트 날짜(2012.3.22.)가 게시글 등재 날짜(2012.12.21.)보다 먼저 이뤄진 것으로 보아, 게시글 이후에 정보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시켜 주고 있다.

두 번째 사례로는 기록물 조작·은폐 유형으로 ‘5·18 기념재단 타임라인 기록물 조작’을 살펴볼 수 있다. 일베 이용자는 수사 기록 원본을 제시하며, 첫 사망자가 계엄군이고, 이로 인해 최초 발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수사기록 원본의 맥락을 파악한 결과, 최초 사망자는 앞서 말한 김경철(<그림 3> 검찰수사기록 오른쪽 위 빨간 표시)씨였으며, 최초의 발포는 다른 시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 또한 게시글 생산자에 의해 기록물이 은폐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3> ‘기존 수사기록 은폐 후 주장’ 분석 결과



세 번째 사례로는 기존 사실과는 달리 기록을 해석하는 유형으로 ‘배승일씨 공로 회복 왜곡 해석’ 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 게시글은 이용자가 ‘폭동’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시민군 등의 총기 무장 사건을 다룬 게시글이다. 이용자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배승일씨 사례’를 들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5·18 폭동을 진압한 공로자였던 계엄군 176명은 훈장을 박탈당하였지만 이때 박탈 대상자 배승일씨는 불복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훈장을 다시 찾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게시글은 배승일씨가 계엄군으로서 폭동을 진압한 것을 인정한 사례라 주장하였는데, 출처 분석 결과 나타나게 된 ‘프레이션안³³⁾’의 기사는 일베 게시글과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승일씨는 스스로 자신은 계엄군이 아니라고 증언하였으며,

는 당시 지만원이 탄원서를 통해 5·18이 폭동이라 말했던 부분에 대해, ‘신군부 세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충기를 들었던 점’을 들며 그의 주장을 거부했다. 때문에 이를 왜곡 사례로 선정하였다.

<그림 5> ‘유네스코 기록물 단어 왜곡 해석’ 분석 결과

제목 : [수정/재업] 유네스코, “광주민주폭동” 자폭 (2015.06.11)

[수정/재업] 유네스코, “광주 민주 폭동” 자폭 인물국니그네

<http://www.bbc.com/1/3112300> 2012.12.21 15:26:56

광주대동미 “유네스코 등재 되서 세계가 인정했다”, “외국인들도 인정한다” 라고 말하는 병신 위허서 열방에서 조사했다.

장르

http://www.unesco.org/new/FileManager/MULTIMEDIA/HQ/CI/CI/pdf/mow/nomination_forms/Korea%20Human%20Rights.pdf

자.. 유네스코? 어라? 자동자 자동입으로 찍음.

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 라고 표명했냐?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1980

Archives fo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
in Gwangju, Republic of Korea

Ref/Nº 2010-26

해석하면, “폭동에 대한 민주적 폭동 (또는 반란)” 으로 해석한다.

유네스코가 말하는 5·18의 진실 (5·18기념재단 발간자료)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인증서 내에 있는 5·18의 영문 제목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에서 ‘Uprising’

단어를 유네스코의 의도와는 달리 ‘폭동’이라 해석

👉 기록물 왜곡 해석

또한 추가로 「5·18 기념재단」 관계자를 통해 이 왜곡 사례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려 하였지만,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 위원회의 해체로 인해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5·18 기념재단」의 입장을 대신 전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Uprising’은 사전적으로 ‘항쟁’을 뜻하며 일간베스트에서 ‘폭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많은 시민 항쟁, 민주화운동 또한 ‘Uprising’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임을 알려드립니다.”

3) 분석 종합 및 시사점

이상으로 ‘폭동’ 담론의 왜곡 유형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연구자가 파악한 왜곡 기록물과 기존에 「5·18 기념재단」에서 제시한 왜곡 기록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3> 「5·18 기념재단」과 연구자가 파악한 왜곡 기록물의 종류

기념재단 분석	연구자 분석
신군부 시대 기록물 및 언론 탄압 기사문	‘역사바로잡기’시절 발견한 사진, 영상 기록물 5·18 관련 수사기록, 판결문
공통	
유네스코, 헤리티지 재단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	

우선 왜곡 기록물을 파악하기 위해 「5·18 기념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왜곡 담론이 형성되기 위한 기록물을 파악한 결과 ‘신군부 시대 자료’, ‘신군부 시대 언론 탄압 기사문’, ‘유네스코·헤리티지 재단 기록물’로 압축하였다. 다음으로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폭동’ 담론 형성 과정에서 분석한 왜곡된 기록물의 종류는 1980년 김영삼 정부 당시 ‘역사바로잡기’과정에서 발견한 사진·영상 기록물, ‘판결문·수사기록’, ‘유네스코·헤리티지 재단 등재 기록물’이었다.

왜곡 사례 분석 결과 ‘폭동’ 담론 형성자들은 출처 제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자료의 생산처, 원자료 등은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역추적 프로세스를 통한 분석 결과

이들은 원본 기록물의 역사적 맥락은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자의적 입론에 따라 자료를 재배치, 재가공하여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고 있었음을 파악하였다. ‘폭동’ 담론조차도 기록에 근거해야만 자신들의 논리가 신뢰성을 얻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록을 왜곡해서라도 증거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어떤 담론이라도 기록을 중요시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폭동’ 담론의 경우 실제 기록을 있는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진본성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근거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키비스트로서의 전략이 필요하다.

4. 기록 왜곡에 대응하는 기록관리 전략

1) 5·18 관련 기관의 왜곡 대응 현황

이상에서 5·18 기록을 왜곡하는 담론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왜곡된 담론 형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18에 관한 다양한 해석은 존중받을 수 있지만, 기록을 왜곡하면서까지 잘못된 해석을 하는 집단은 존중받을 수 없다. 현재까지도 기록을 왜곡하는 집단은 무수히 양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키비스트는 하루빨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왜곡 담론에 대응하기 위한 진실 담론이 형성되려면 왜곡 담론에 대해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키비스트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록관리 전략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아키비스트가 기록관리 전략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관의 현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과 이용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키비스트이기 때문에, 담론 형성의 피주체자인 잠재적 이용자들이 기록관의 정보를 통해 진실된 담론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록관리 전략을 제안하기 전 국내의 5·18 기관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순수하게 5·18을 주제로 하고 있는 기관은 「5·18 기념재단」을 비롯해,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광주 트라우마센터」 등이 있다. 이들은 기록관보다는 추모 사업의 성격이 강한 기관으로써, 기록물의 관리가 타 기록관보다 소홀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5년 5월 13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이 개관하였고 같은 해, 7월 위 4개 기관의 기록물을 협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젝트³⁴⁾를 진행하면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기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기관 중 5·18 왜곡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은 「5·18 기념재단」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5·18 기념재단」은 광주광역시와 함께 2013년 5월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훼손사례 신고센터’를 개설, 이를 담당할 인력을 채용해 하루 4건 이상 올라오는 왜곡 사례에 일일이 대응하고 있었다.³⁵⁾ 현재 신고 센터를 관리하는 운영자는 광주광역시 소속 1인, 「5·18 기념재단」 소속 1인 총 2명이며,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³⁶⁾의 법률·사이버 대응팀에서 면밀히 검토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방식으로

34) 5·18 기념재단, 한국국가기록연구원, 「5·18 민주항쟁 기록물의 협력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15.

35) 2013년 5월 24일~2015년 9월 30일까지의 신고 건수 분석 결과, 하루 4.5건의 게시글이 등록되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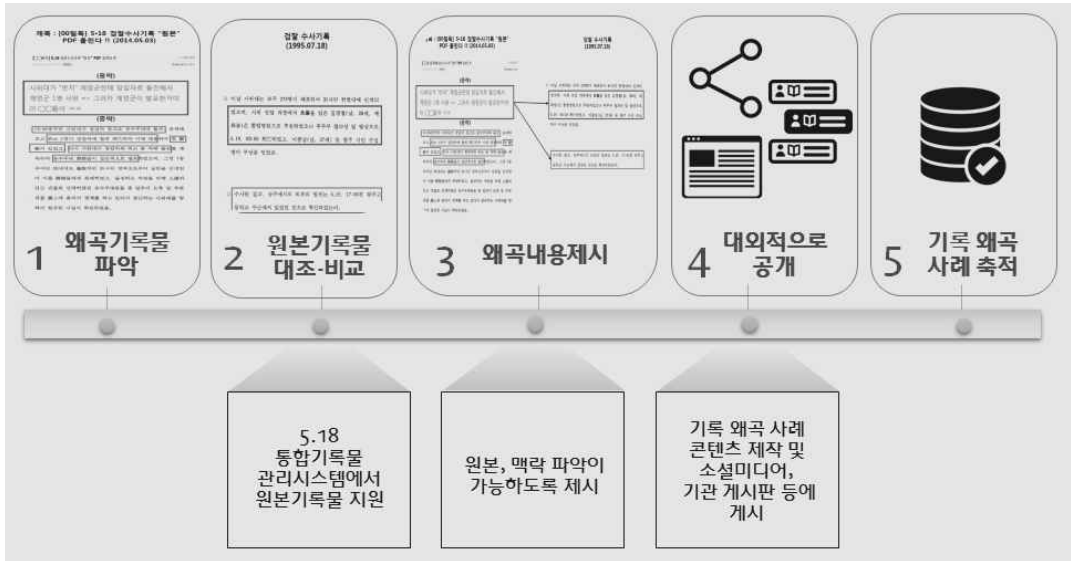
36) 2015년 현재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존재하지 않고 5·18 관련 단체장, 국회의원, 변호사, 공무원 등 4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왜곡 대응 담당자가 기록연구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라는 점은 기록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록물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 기록 왜곡 대응 조직 및 프로세스 설계

현재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용자와 같이 왜곡된 기록물을 제시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5·18 왜곡 담론의 1차 수용자로 부르며, 이들은 각종 왜곡된 정보를 게시함으로써 5·18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불특정 다수의 2차 수용자들에게 무분별한 왜곡 담론을 형성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2차 수용자들이 대부분 담론 형성이 되지 않은 젊은 층이라는 점으로 볼 때 어린 세대가 왜곡 담론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용자들은 왜곡담론의 1차 수용자임과 동시에 생산자이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전략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아키비스트는 한정된 기록관에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소극적 입장이 아닌, 직접 5·18 담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설정한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아키비스트의 기록 왜곡 대응에 관한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6> 기록왜곡 대응을 위한 아키비스트의 기록관리 전략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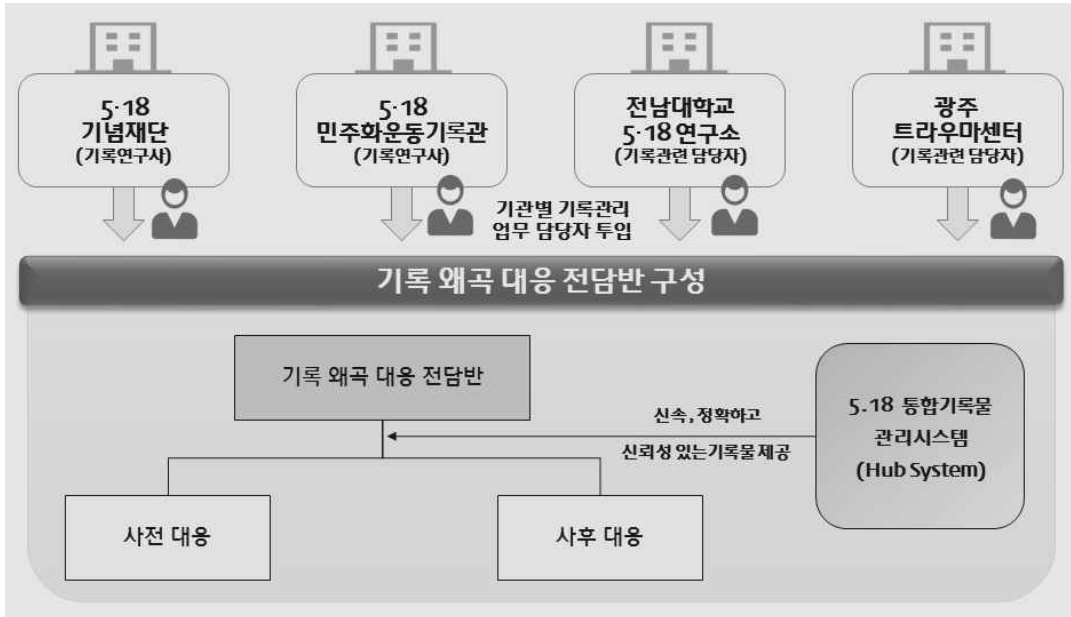
기록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키비스트가 대응 전략 프로세스를 작성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아키비스트는 기존 신고 센터 혹은 직접적인 검색 등을 통해 왜곡된 기록을 근거로 한 5·18 담론을 발견한다.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의 전후 맥락을 파악한 후, 대내외적으로 왜곡된 결과를 공개하여 사람들이 왜곡 담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공개된 왜곡 사례는 지속적인 보존, 즉 축적을 통해 추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포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기록 왜곡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5·18 기관의 시사점 분석을 통해 파악한 4개 기관의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왜곡 대응 체계 미비였다.³⁷⁾ 이에 따라 5·18 기관이 나타내고 있는

37) 프로젝트 내 각 기관별 SWOT 분석 결과 참여 기관 모두 인력과 예산 부족을 Weakness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처 : 「5·18 민중항쟁 기록물의 협력적 관리를 위한 연구 보고서」, 2015, 14~32쪽.)

시사점을 통해 현실적인 기록관리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제시하는 기록관리 전략은 문제점으로 지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왜곡 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를 가능케 한다. 전략 구조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매트릭스 조직’을 적용한 ‘기록 왜곡 대응 전담반’ 구성



위 모형은 매트릭스 조직을 도입하여 구성한 ‘기록 왜곡 대응 전담반’이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4개 기관은 모두 기록물 관리 인력의 부족을 한계점으로 파악하였지만, 이들은 모두 기록물의 협력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5·18 기념재단」 아키비스트 한 명이 아닌 각 기관별 기록물 관련 업무 전문 담당자와 함께 매트릭스 조직을 새롭게 적용하여 ‘기록 왜곡 대응 전담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다. 매트릭스 조직은 인적 자원의 융통성 있는 활용과 의사 결정의 집권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³⁸⁾

이러한 조직은 기관 간의 마찰과 권한 다툼에 대한 염려, 그리고 두 명의 상사를 한 번에 대해야 한다는 점(Two Boss System)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프로젝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구성원들에게 주지시키며 이를 유능하게 진행할 수 있는 리더를 선발해 업무를 수행한다면 적절한 구조라고 판단된다. 또한, 5·18 관련 기관과 같은 곳에서 이 구조를 활용하게 될 경우 비교적 적은 예산을 투입함과 동시에 기존 인력만으로도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트릭스 조직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실시되는 조직이다. 각 기관에서 파견된 기록물 관리 담당자는 평상시 기관 소속으로 업무를 맡게 되며, 정기적으로 대응반을 꾸려 회의를 거친 후 필요시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대응 전담반 초기는 각 기관의 특성을 정립하고, 대응을 위한 구성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되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정립되고 난 후부터는 유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각 기관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록 왜곡 대응 전담반’의 특징은 왜곡 전체를 대응하는 것이 아닌 기록에 근거한 왜곡 사례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위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에 투입되는 인력 역시 아키비스트를 포함한 기록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들의 목적은 직접적인 대응을 통해 왜곡된 기록물을 정상화시킨 후, 왜곡된 사례를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더 이상 왜곡 담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38) 천명섭, 최병우, 『경영조직론』, 무역경영사, 2011, 3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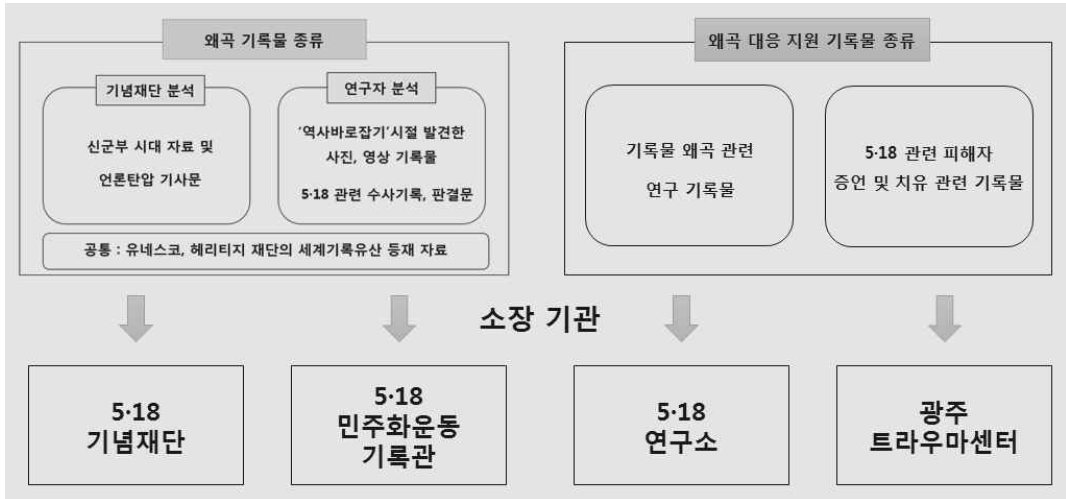
3) 왜곡이 용이한 기록물에 대한 관리 방안

아직 왜곡된 담론에 물들지 않은 집단에게 정당한 담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콘텐츠를 생산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왜곡 기록물의 종류에 대해 파악되어야 한다. 미리 파악된 예상 기록물을 토대로 생성된 콘텐츠를 통한 홍보·교육은 담론 미형성 집단에게 왜곡 담론이 제공하는 근거 없는 기록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막이 될 것이다.

왜곡이 용이한 기록물에 대해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왜곡 담론이 사용 가능한 기록물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왜곡이 가능한 기록물을 파악한 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잠재적 담론 형성 집단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때, 왜곡된 담론을 비판하는 행동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는 향후, 통일적 기준으로 기록물을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록물을 통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사전식별지표 제작은 기록 왜곡실태 분석 시 사용되었던 기록물을 파악한 후, 비슷한 종류의 기록물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사용된 왜곡 기록물의 종류를 파악하여 기존에 「5·18 기념재단」이 분석한 결과와 함께 제시하는 과정까지 진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기관별 왜곡 가능 기록물 사전식별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각 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범위를 매핑 분석하여 나타나게 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³⁹⁾

39) 자세한 내용은 5·18기념재단, 한국국가기록원, 앞의 글, 18~33쪽 참조.

<그림 8> 5·18 기록물 소장 기관 설정을 위한 매핑 분석 결과



왜곡 기록물 종류와 각 기관별 관리대상 기록물 범위를 매핑한 결과 왜곡기록물은 모두 「5·18 기념재단」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이 소장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머지 두 기관인 「5·18 연구소」와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지속적인 지원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며 연구 기록물 및 치유 기록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록물을 기록관에 보존만 할 수는 없다. 기록 보존의 목적 중 하나가 서비스이며, 서비스의 대상은 이용자이다. 하지만 이용자가 기록물에 대한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기록물의 보존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언론 분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미디어를 선택한 후, 대외적으로 기록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왜곡 담론에 대항하고자 하는 집단 간의 담론 연합체 형성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의 속도에 적응하며, 극우 단체의 미디어 이슈화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왜곡 사례에 대한 공개 후 이에 대한 콘텐츠 제작과 동

시에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적한다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비슷한 사례의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앞선 사례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진실된 기록을 근거로 한 담론 형성에도 큰 효과를 미칠 것이다.

<그림 9> 왜곡 사례의 대외적 공개에 의한 담론 형성 과정



또한 왜곡 내용에 대응하는 진실된 기록물과 함께 맥락 파악을 위해서는 제시된 기록물이 신뢰성과 권위성을 갖추어야 한다. 신뢰성 있는 기록물을 접했을 때 기록물은 사람들에게 더욱 믿음을 줄 수 있으며 추후, 진실된 담론 형성 과정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담론분석을 통해 각 담론의 기록 활용 실태와 담론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 왜곡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왜곡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기록관리 전략을 제안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아키비스트는 왜곡 담론에 대응해야 할

3가지 역할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첫째, 어린 세대를 왜곡하는 담론 형성 집단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 그들이 진실된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아키비스트가 노력해야 한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현재는 미디어를 통한 담론 형성의 과급력이 엄청난 영향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SNS 등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이 끊임없는 왜곡 담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극우 단체의 왜곡 담론에 대항할 수 있는 미디어 활용 능력을 키우고, 신뢰성과 권위성 있는 기록물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둘째, 아키비스트가 어느 한 쪽을 지지하고자 할 때, 신뢰성 없는 자료에 근거한 비윤리적 담론의 과급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양심적인 아키비스트가 되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자신의 담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기록물의 활용,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만약 아키비스트가 신뢰성 없는 자료에 근거한 비윤리적 담론의 과급에 대해 방관하고 있거나, 진실된 기록을 제공하는 정당한 대항 담론의 형성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키비스트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담론 형성 집단에 속하고자 할 때, 윤리적 사명을 가슴에 품고 양심적인 기록물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5·18 외 다른 아카이브 영역에서도 사회적 갈등 담론이 존재한다면, 아키비스트는 어느 쪽에 서든지 담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록관리 전략에 대해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단지 5·18 왜곡 담론에 대응하기 위한 기록관리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는 5·18뿐만 아니라 여러 담론이 서로 경쟁을 하며, 지배담론으로서 확립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보다 타당성 있는 ‘진리’를 산출한 세력이 해당 문제에 대한 담론적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에서, 아키비스트는 진실 되고 정당한 기록물 제공을 위해 최선

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자신이 지지하는 담론 형성 집단이 지배담론으로 강화되기 위해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궁리해야 할 것이다.

기록의 왜곡은 과거에도 수없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또한, 왜곡된 기록물을 제공함으로 인해 역사의 뿌리까지도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독일의 나치 선동가 괴벨스가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말을 하였던 것처럼, 5·18 역사 왜곡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거짓이 사실인 양 증폭되어 5·18의 진실이 왜곡되는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우리가 역사를 통제하려는 집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제되지 않기 위한 진실된 기록을 제공하는 건강한 아키비스트가 되어야 한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악행을 중단시킨 주인공이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Theseus)였던 것처럼, 지금부터 하염없이 테세우스를 기다려야 할지, 우리 스스로가 테세우스가 되어야 할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록관리의 투명하고 깨끗한 제공을 위한 발전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Strategy for a Discourse Analysis : Focusing on the Archives Distortion of the 5·18 Discourse

Lee, Jin-Ryong·Yim, Jin Hee

In May 2011, the 1980 Archives fo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or the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were registered as a UNESCO Memory of the World. This historic moment told the world that the 5·18 movement is a valuable and historical asset. However, despite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archives that deny of such facts are still rampant because of misdirected standings and prejudices. These sources even develop discourses by distorting the archives to justify their claims. Accordingly, the study aimed to identify how these sources form ideologies surrounding the 5·18 movement discourses, which are characteristic of extreme social standings. It explored the possibility of the distortion of archives presented for each discourse and reconsidered the archivists’ positions and roles to cope with such possibility.

In addition, the author aims to suggest a more systemic strategy to advance the existing responses against the distortions, as well as provide discourses that are based on true and accurate archives mainly to students who have not yet been introduced to such distorted discourses. In the future, archivists shall try to develop positive awareness about the 5·18 discourses rather than maintain passive positions that provide information

from limited archive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advance future analyses that would be effective against the distortion of archives.

Key words :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Resistance, Riot, Discourse Analysis, Distorted Discourse, Records Management Strategy